

사회

“돈 더 내라” 막가는 대리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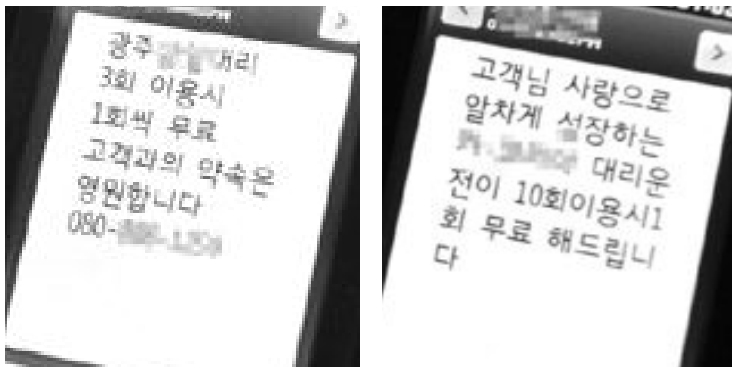
#1 최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로 이사는 박모(여·31)씨. 박씨는 지난 주말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승강기를 했다. 집 앞에 도착한 대리기사에게 ‘추가요금 2000원’을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광주 전 지역 1만원”이라는 플래카드 광고를 봤다”며 대리기사에게 1만 원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리기사는 “수완지구에서 나가는 고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비 차원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모든 회사가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는 기사의 말에 2000원을 건낼 수밖에 없었다.

#2 회사원 김모(27)씨는 최근 한 대리운전 업체의 허위 광고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업체로부터 “3회 이용시 1회 무료”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고 3차례나 같은 업체의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정작 무료 혜택은 받지 못했다. 상담원에게 항의했지만, “곧 연락 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될 뿐 더 이상 조치는 없었다.

최근 광주지역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과다요금 요구와 거짓광고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수완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뚜렷한 기준 없

‘광주 전지역 1만원’ 플래카드 내 걸고 수완지구 등 2000~5000원 추가 요구 “3회 이용시 1회 무료” 약속도 안 지켜 승객·기사 요금 시비 폭행사건 잇따라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낸 서비스 광고 메시지.

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수완지구나 평동, 북구 용전동, 서구 매월동, 서구 서창동, 남구 노대동 등 20여곳에 대해 2000원~5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완지구와 용전동 등의

경우 주행 거리가 아닌, 고객 확보 편의 여부에 따라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다음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대리기사의 택시비와 시간 비용을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완지구의 경우 광산구 운남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와 인접해 있는 데도 업체들이 1만2000원을 일

률적으로 요구해 이용자들이 불평하고 있다. 업체들은 당초 수완지구 조성 직후 ‘미분양 등에 따라 입주자들이 적다’는 이유로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았지만, 입주가 거의 완료된 현재까지도 이용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는 ‘대리운전을 특정 횟수 이상 이용할 경우 1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 광주일보가 ‘OO대리운전, 3회 이용시 1회씩 무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한 대리운전업체를 연속 4회 이용해본 결과 무료 이용은 허위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대리기사를 4회씩 이용하자 ‘4000원 적립’이라는 메시지만 전송했을 뿐 무료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대리운전 업계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대리기사와 고객들이 요금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까지 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는 대리운전 요금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이 매일 2~3건씩 접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고차 매매 상인 동료에 15억 사기”

10명이 고소장... 자영업자 등 20명도 “3억 사기 피해”

광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동료 매매상으로부터 15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가 나섰다.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매월동 중고차 매매상 김모(33)씨 등 10명이 동료 매매상 이모(34·서구 풍암동)씨로부터 15억원 이상의 돈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7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씨의 경우 지난 5년간 중고차 매매상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중고차를 사온 뒤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챙기는 일을 해왔다”면서 “이씨가 중고차를 사온다기에 그 말을 믿고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액이 15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실제 피해액이 80여억 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모(33)씨 등 자영업자 20명은 또 다른 중고차매매상 강모(33)씨로부터 3억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씨 등은 고소장에서 “캐피탈 업체를 통해 차를 구매하던 강씨가 차를 되팔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돈만 챙겨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고소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86) 김종두



여수시장 선거운동원

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선거운동원 봉사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충석 여수시장의 선거운동원 김모(63)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 선거운동원 봉사자 10여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를 받은 뒤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 4명을 소환하는 등 김씨의 금융 살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김씨가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맞지만, 김씨에게 돈을 건네거나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술먹기 거절한 동거녀에 주먹질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거녀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9·광주 서구 양동)씨는 이날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자고 있던 동거녀(26)를 깨워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박씨는 경찰에서 “가볍게 한잔만 더 하려고 했는데 거절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수륙양용 장갑차 저수지 침몰

훈련중 육군 부사관 1명 사망

장성 상무대 앞에서

장성에서 시험 훈련 중이던 수륙양용 전투장갑차(K21)가 저수지에 침몰해 부사관 1명이 숨졌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앞 저수지에 육군 기계화학교에서 시험 훈련 중이던 장갑차가 수심 5m 물속에 침몰해 조종사 김모(23) 중사(진급 예정)가 숨졌다.

이날 사고는 도하 훈련을 위해 저수지에 들어간 장갑차가 갑자기 운행이 중지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장갑차에는 김 중사와 함께 제작 업체인 D사 직원과 이등병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D사 직원과 이등병은 침몰 직전 탈출했지만, 김 중사는 탈출하지 못한 채 장갑차 바다

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스쿠버를 저수지 안으로 투입해 장갑차 인양을 위한 체인을 설치한 뒤 또다른 장갑차를 이용해 무게 30t 가량의 사고 장갑차를 인양했다.

국산 장갑차인 K21은 헬기 잡는 장갑차로 알려져 있으며, 지상 최고 시속이 70km에 이르고 에어백 양장치를 통해 수상에서도 시속 7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K-21은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양평 남한강 일대 도하훈련 도중 엔진이 정지해 일부 침수된 바 있어 장비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육군 기계화학교는 지난해 11월 K21 장갑차 5대를 배치받아 16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도하훈련에 들어갔다.

/중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yongho@



군부대 요원들이 29일 저수지에 침몰한 전투장갑차(K21)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중사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yongho@



상무소각장 견학

2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에 견학 온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북구청이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B형간염 예방접종 영아

7시간만에 숨져

목포에서 생후 8개월된 여자 아기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지 7시간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9일 목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생후 8개월인 A양이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이 보건소에서 B형 간염 3차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뒤 이날 오후 5시50분께 숨졌다.

A양은 이날 오후 3시께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아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A양의 사인을 영아 돌연사로 판정했다고 보건소 측은 전했다.

A양의 유족은 A양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갑자기 숨지자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고, 보건소에서도 지정된 지침에 따라 냉동보관한 주사약을 사용했다”며 “부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지만, 일단 동일 제품을 모두 봉인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1~3개월 가량 영업하고 나서 이동했으며, 경로당을 돌며 홍보 전단지 및 경품권 배포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약을 판매하기 전에는 심청전이나 춘향전 등 판소리 공연을 하는 한편, 쌀과 화장지 등을 경품으로 주면서 노인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업자 정씨와 홍보부장, 가짜 약사 등 12명을 상대로 추가 범 죄를 추궁하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노인 상대 ‘뺏다방’ 12명 검거

건강보조식품 ‘만병통치약’ 속여 1억3000만원 쟁취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정모(43)씨 등 12명을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검자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건물 1층에 이른바 ‘뺏다방’ 업소를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실제 가격보다 8배 이상 높은 값에 팔아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업장을 만든 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아무도 몰랐던 보청기 • 인공청각 • 가격의 절반 이하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무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82-9300
 혁신점 (063) 651-2422